

7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 ■ 많이 낸 진료비, 건강보험이 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 2010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200~40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르면 7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금액(상한액 200~4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 '10년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총 4,631억원(사전 850억원, 사후 378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09년에 비해 대상자는 약 1만명 정도 감소되었으나 환급금은 13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 감소이유는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율 인하('10년 1월)와 중증화상환자의 산정특례 적용('10년 7월), 결핵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 본인부담 10→5% 인하: 암('09.12), 심장·뇌혈관('10.1)
 - * 중증화상·결핵환자 본인부담 인하: 30~60%→5%('10.7)
-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7월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 ■ ■ 2016년까지 가족친화기업에 연기금 투자 늘리기로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7월 5일(11:30~13:20) 서울 하이아트 호텔에서 진수희 장관 주재로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CEO를 초청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 조성 포럼’을 개최하고 저출산극복을 위한 가족친화·출산친화 경영에 기업 CEO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날 기조강연자로 나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럼에 참석한 기업 CEO 및 임원진에게 “저출산 극복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필수요건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기업 등 사회 각 부분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진장관은 이어 “기업의 본래 목적이 이윤추구에 있으므로 출산친화·사회공헌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어 가족친화 경영의 협조요청만으로는 현실적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서,
 - “국민연금기금을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출산·가족친화 경영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진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이 현재 340조에 달하며,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62조원 중 3조1천억원을 사회적책임(SRIF)펀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펀드를 2016년까지 11조원으로 확대하여 가족친화경영을 열심히 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 “이를 위한 투자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사회적책임투자지표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 “기업에게는 생산력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은 새로운 가입자를 확보함으로써 기업과 국민연금이 함께 Win-Win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 “부양부담이 낮은 향후 5~10년간의 인구 보너스 기간을 기회로 함께출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7 수준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이날 행사에는 시가총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의 CEO 및 임원진 50여명과 김영순 대통령 여성특보 겸 인구협회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 ■ ■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명성 혁신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대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TF」를 구성하고,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방안을 8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연금은 최근 세계 4위 연기금으로 도약하여 글로벌 연기금으로 위상을 높이고, 2년 연속 투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성과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거래증권사 선정 등 기금운용과 관련한 일부 부적정한 업무 처리 등이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고,
 - 복지부는 기금운용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대대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TF는 ① 투자 시스템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② 개인거래 제한, 전관예우 금지 등 내부통제 강화 ③ 비리방지를 위한 처벌 및 인센티브 등 인력관리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 첫째, 투자결정시스템과 관련하여 거래증권사 및 위탁운용사 평가기준 및 평가 프로세스(정량평가, 정성평가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등) 운영 등
 - 투자결정·관리·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둘째, 내부통제체계 실효성 강화와 관련하여 전관예우 등 이해상충 문제, 개인거래 제한, 편의수혜 제한 등 기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규정의 내실화 방안, 운용점검 및 자가점검 시스템 재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셋째, 인력관리 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관리 시스템, 공단 내 준법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TF는 보건복지부 주관(TF 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공단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3개(투자결정시스템, 내부통제체계, 인력관리시스템)의 분과를 설치하여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 ■ ■ 복지부, “서민 희망”과“미래 준비” 위한 '12년 37조 6,874억원 예산요구

- 보건복지부는 서민희망과 미래준비를 위해 금년(33.6조원) 대비 12.3%(4.1조원 ↑)가 증가한 37조 6,874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함
 - 보건복지부의 '12년 요구 규모는 정부전체 총지출 요구규모(332.6조원)의 11.3% 수준
 - 금년 대비 보건복지분야 총 증가액 6.2조원의 66%(4.1조원)를 차지하는 규모임
- 보건복지부는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사회안전망 내실화 등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금년대비 2.9조원이 증가한 29조 1,649억원 요구
 - * 보건복지분야 재정지원일자리 확대: '11년 354천→'12년(안) 415천개(61천개 ↑)
 - 특히,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금년대비 6,539억원 증가한 9조 2,212억원 요구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등 보건 분야에 8조

5,225억원을 요구함

* 보건의료 R&D 투자: '11년 3,351억원 → '12년(안) 4,285억원(27.9% ↑)

<2012년 정부전체 대비 복지부 총지출 요구 규모 비교> (단위: 조원, %)

구분	'11년(A)	'12년 요구(B)	'11년 대비	
			증감(B-A)	(%)
◇ 정부 총지출*	309.1	332.6	23.5	7.6
• 예산	216.4	235.3	18.9	8.7
• 기금	92.7	97.3	4.6	5.0
◇ 보건·복지분야 총지출	86.4	92.6	6.2	7.2
◇ 복지부 총지출	33.6	37.7	4.1	12.3
• 예산	20.7	23.6	2.9	13.9
• 기금	12.9	14.1	1.2	9.6
* 복지부 지출 비중(%)	10.9	11.3		

* '11.6.30 50개 중앙관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요구서 기준

<2012년 보건복지부 분야별 세출 예산안> (단위: 억원)

구분	'11(A)	'12년 요구(B)	11년 대비	
			B-A	%
<총지출>	335,694	376,874	41,180	12.3
○ 사회복지	262,993	291,649	28,655	10.9
- 기초생활보장	75,168	78,983	3,815	5.1
- 취약계층 지원	10,505	13,229	2,724	25.9
- 공적연금	109,106	123,412	14,306	13.1
- 보육	25,600	29,442	3,842	15.0
- 노인	37,313	40,612	3,299	8.8
- 사회복지일반	5,301	5,972	671	12.7
○ 보건	72,701	85,225	12,524	17.2
- 보건의료	15,599	19,849	4,250	27.2
- 건강보험	57,102	65,376	8,274	14.5

□ 상기 예산 요구안은 정부차원의 투자 우선순위, 국가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부내 심의(기재부 예산실)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 예정(9월말)

※ 지난해에는 '11년 예산안 34조 7,485억원 요구('10년대비 12.0% ↑), 최종 정부안은 33조 5,144억원('10년대비 8.0% ↑)으로 확정되어 국회 제출

저출산 극복 '마더하세요' 캠페인 전개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남편의 육아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마더하세요(마음을 더하세요+엄마되세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 기존 저출산 극복 캠페인은 '아이의 소중함'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진행(예, '아이는 내 인생 최고의 작품' 등)되었으나,
 - 일과 가정을 조화하기 어려운 직장, 가정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저출산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되었다
- 먼저, 가정에서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들에게 보내는 불편한 시선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아내와 자녀에게 마음 더하기 캠페인이 진행된다.
- 또한, 엄마·아빠의 일과 가정의 조화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직장에서도 마음 더하기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 출산용품을 물려주는 직장 후배, 임신부 앞에서 큰소리도 내지 않는 직장 동료부터,
 - 정시퇴근을 독려하는 부장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는 사장님 및 배우자 출산휴가 중인 후배를 안심시키는 직장 선배까지 이들의 마음 더하기가 곧 '마더하세요'를 의미한다.
- 보건복지부는 '마더하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온라인 및 SNS를 통하여 '마음더하기 릴레이 캠페인' 및 '세상을 바꿀 100인의 아빠단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 '마음더하기 릴레이 캠페인'은 임신·육아기에 있는 엄마, 아빠들에게 온 국민이 마음을 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예비 엄마의 기대감 가득한 이야기, 아빠들의 좌충우돌 육아 이야기 등 가족의 바램을 담은 사연에 100인의 마음(응원 댓글)이 더해지면 바램을 이루어 주는 이벤트이다.
 - 한편, 다음 주부터 '임신·출산·육아지원 정책 시뮬레이터, 김양수의 마더하세요 웹툰'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 '100인의 아빠단 프로젝트'는 아빠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것으로,
 - 육아에 무지한 아빠가 스타 멘토*와 함께 '요리', '놀이', '육아' 등의 비법을 전수받아 육아 고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마더하세요' 블로그 및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확산하는 캠페인이다.
 - * 아나운서 박찬민, 탤런트 정은표, 개그맨 박준형 등 육아에 적극적인 롤모델
 - 현재 '100인의 아빠단' 참여자를 모집 중이며, 이달 말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마더하세요' 블로그에서 신청 가능하다.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팝업존 / www.mothersplus.blog.me

- 진수희 보건복지부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아빠와 기업,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더해져야 하는 일”이라며,
- “저출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의 ‘마음 더하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하반기 응급의료 서비스, 이렇게 좋아져요!

-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친화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이송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국민생활 서비스>

- 의사탐승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천·전남 지역 주민부터 수혜
- 응급환자 이송가능병원, 실시간 확인 가능
- 전문의가 진료하는 소아전용 응급의료센터, 4개 병원 추가 운영
- 취약지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가 새로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
- 응급 코디네이터 배치(85개 병원), 전원·이송 도우미 서비스 제공
- 응급의료기관 평가, 국민이 직접 참여 - 서비스만족도 설문평가

<정책 사항>

- 중증의상센터 설치 계획, 8월 중 사업내용 확정·발표

<법·제도 변경 사항>

- 응급실에서 당직전문의 직접 진료,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12년)
- 국내체류 외국인도 응급의료대상('11년)
- 환자이송 시 이송처치료 외 별도비용 청구불가, 위반시 행정처분('11년)

당신의 노후, '100세누리'에서 상담하세요

- 보건복지부는 다가올 100세 시대에 발맞추어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100세누리(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 포털을 7월 18일(월) 본격 오픈한다고 밝혔다.
- 100세누리(www.100senuri.go.kr)는 일자리·교육·건강·여가·복지 등 생활 전반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후생애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노후정보포털이다.

□ 「100세누리」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 인턴 모집 기업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 특히, 구직노인의 희망직종, 지역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구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매칭 지원하며, 추천된 일자리에 대해서는 직접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 둘째, 노후 설계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등을 통해 체계적인 노후관리를 지원한다.
 - 본인의 현재 노후 준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전문상담 신청 시에는 3~5일내에 노후생애설계전문가로부터 온라인상담 결과를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
 - 또한, 건강·여가·복지·재무 등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의 정보로 제공된다.
 - 특히 이러한 정보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구성된 ‘지식활동대*’가 직접 기획·발굴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 * 지식활동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원 및 5개 지역본부에서 6명이 활동 중
 - 셋째, 개인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 사용자는 일자리, 교육, 자원봉사에 대해 자신의 거주지, 기존 경력 등이 고려된 정보를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 즐겨보는 메뉴 및 콘텐츠 설정을 통해 자신의 생애경력을 관리 할 수도 있다.
- 복지부 관계자는 “100세누리 포털은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하나의 허브창구에서 쉽고 빠르게,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스마트시대의 사용자 편의성 도모를 위해 향후 모바일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성인남성 흡연율, 지속 하락

□ 보건복지부는 21일 2011년 상반기 흡연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 조사기관(리스크피아트 조사연구소), 조사대상(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
- 상반기 성인남성흡연율은 최근 1년간 3.6%p, '10.12월 대비 0.6%p 감소하여 30%대 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성인남성흡연율: ('09.12) 43.1% → ('10.6) 42.6% → ('10.12) 39.6% → ('11.6) 39.0%

- 성인여성흡연율: ('09.12) 3.9% → ('10.6) 2.8% → ('10.12) 2.2% → ('11.6) 1.8%
- 남성 흡연율은 30대(51.2%)가 가장 높고 60대(20.1%)가 가장 낮았으며, 여성은 20대(3.6%)가 가장 높았다.
 - ※ 남성흡연율: (30대)51.2.1% > (40대)42.3% > (20대)40.5% > (50대)34.1% > (60대)20.1%
 - 여성흡연율: (20대)3.6% > (60대)2.1% > (50대)1.6% > (40대)1.2% > (30대)0.9%
- 최초 흡연 및 규칙적 흡연 시작연령도 '10.12월에 비해 낮아져 각각 20.6세, 21.2세로 나타났다.
 - ※ 최초 흡연연령: ('10.6) 21.2세 → ('10.12) 21.1세 → ('11.6) 20.6세
 - 규칙적 흡연연령: ('10.6) 22.1세 → ('10.12) 21.6세 → ('11.6) 21.2세
- 현재 담배가격(평균 약 2,500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가 '싸다'고 응답했으며, 적정 담배 가격을 8,559원 정도라고 답했다.
 - ※ 적정 담배가격: ('10.6) 8,510원 → ('10.12) 8,056원 → ('11.6) 8,559원
-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금연구역 확대 및 단속강화' (27.3%), '담배가격 인상' (21.4%), 'TV 및 라디오를 통한 교육 홍보 강화' (19.4%)를 생각했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토록 한 도시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57.0%가 '적정하다'는 의견이었다.
-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금연을 위한 대용품' (40.1%), '기존 담배보다 덜 해롭다' (37%)라고 잘못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46.0%는 흡연의 위해성을 효과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 도입이 필요하고, 길거리, 음식점, 아파트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흡연율의 감소는 2010년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담뱃값 인상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금연구역 확대 등 법적 규제 강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연조례 지정 등 사회 전반적 금연분위기 조성으로 지속적인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격·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포괄적 금연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2012년 개최 예정인 제5차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협약 의무조항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 ■ ■ 14년까지 21개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 추진

- 저출산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분만실)가 해마다 감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분만취약지 거점산부인과'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이 시범사업 수행 지역 선정, 시설·장비·인력 확충 등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지역 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분만실)가 없어 발생하는 산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 ’11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분만취약지역에 거점산부인과를 설치, 운영 방안부터 추진하였다.
 - 이를 위해 지난 2월 말 충북 영동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예천군 등 3개 지역을 시범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 * (보도자료) 3.2.(조건) 분만취약지역 3곳, 정부지원 산부인과 설치·운영
 - 이 중 충북 영동군과 경북 예천군에서 거점산부인과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7월부터 산부인과 진료를 시작하게 됐다.

[시범사업 지역별 산부인과 개소 현황]

- 충북 영동군 영동병원: 산부인과 개소식 실시(7월 9일)
- 경북 예천군 예천권병원: 산부인과 개소식 예정(7월 29일)
- 전남 강진군 강진의료원: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8월 중 운영 예정

-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거점산부인과 설치, 운영을 위해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 받아 산부인과 관련 시설, 장비를 도입하였으며,
 - 전문적인 산부인과 진료와 24시간 분만이 가능하도록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 신생아·소아과 진료와도 연계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배치하였다.
 - * 산부인과 시설·장비 구축 비용 10억원, 산부인과 운영비(6개월분) 2.5억원 등 총 12.5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 ’12년부터는 연간 운영비 5억원 지원 예정(국비 50%, 지방비 50%)
 - 또한 거점산부인과에서는 일반적인 산부인과 진료, 분만 외에도 해당 지역 보건소와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산모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보건의료사업 내용]

- (영동군)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 강화, 관내 및 인근 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예천군) 임산부 산전·후 보건 교육 및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위탁, 경상북도 운영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과 연계한 환자 관리, 진료 등

- 한편, 복지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산부인과(분만실)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 우선 52개 분만 취약지역 중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지역(21곳 내외)은 '11년도 시범 사업과 같이 거점산부인과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 도서산간 지역 등 지리적 특성 및 적은 출생아(인구) 수 등으로 산부인과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31곳 내외)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 산전 진찰 서비스 확대, 의료기관 연계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 * 취약지 인근 분만 가능산부인과와 지자체간 MOU를 통한 산전 진찰 서비스 제공, 산모 등록·관리제 운영을 통한 산모 밀착 관리 등
 - 아울러 신생아집중치료실 확충 사업, (가칭)고위험 분만 통합 치료센터 개발 추진 등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한 정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분만취약지 거점산부인과 운영을 통해 상대적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의 산모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이 사업이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산부인과 운영, 진료 실적 등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 ■ ■ 액상소화제, 외용연고 등 외약외품 전환 품목 7월 21일부터 약국외 판매 가능

-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6.29~7.18)을 거쳐 7월 21일자로 공포·시행하였다.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외품 범위의 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이하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같은 날자에 공포·시행하였다.
 - 이에 따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48개 품목은 약국뿐 아니라 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 「의약외품 범위의 지정」 고시가 7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48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도 슈퍼마켓, 편의점, 마트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 다만, 복지부와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액상소화제, 외용제 등이 슈퍼, 편의점에서 판매될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전환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슈퍼, 편의점 등에서 안내문을 게시토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 소비자들이 이번에 전환되는 의약품의 직접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하는 것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편의점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에서는

- 제약회사, 도매업자와의 새로운 상품 등록에 따른 공급가 등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 상품 코드 등록 등 행정상 준비절차가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 국민 편의제고를 위해 최대한 빨리 준비를 마치겠다고 알려졌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약품 전환 품목을 생산하는 18개 제약회사에 대해 7월 21일에 고시가 시행된 만큼 의약품 제조판매품목신고필증을 조속히 교부받고,

○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생산되는 품목은 ‘의약품’이라고 기재하여 생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의약품 전환 품목 (48개)

〈건위·소화제 품목〉	1	까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
	2	생륙천액(광동제약)
	3	위청수(조선무약)
	4	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공업)
	5	까스일청수(일화)
	6	솔청수액(조선무약)
	7	광동위생수액(광동제약)
	8	카보명수(조선무약) *
	9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 *
	10	기명수(조선무약) *
	11	위쿨액(동화약품공업) *
	12	까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공업) *
	13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
	14	위솔액(조선무약) *
	15	씨롱액(슈넬생명과학) *
	16	씨롱에프액(슈넬생명과학) *
	17	까스활명수라이트액(동화약품) *
	18	가스활명수소프트액(동화약품) *

*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지 않는 품목('10년)

〈정장제 품목〉	1	청계미아비엠정(미아이리군)(청계제약)
	2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3	미아리산유정(한독약품)
	4	강미아리산정(한독약품)
	5	락토메드산(일동제약) *
	6	청계미아캡셀(미아이리군)(청계제약) *
	7	락토메드정(일동제약) *
	8	청계미아더블유정(청계제약) *
	9	청계미아비엠산(공입군)(청계제약) *
	10	청계미아정(미아이리군)(청계제약) *
	11	헬스락토정(협진무약) *

*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지 않는 품목('10년)

〈연고·크림제 품목〉	1	안티푸라민(유한양행)
	2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3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
	4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
	5	카스칼크림(목산제약) *

*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지 않는 품목('10년)

〈침부제(파스) 품목〉	1	대일시프햇(대일화학공업) *
	2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

*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지 않는 품목('10년)

〈드링크류 품목〉	1	박카스D(동아제약)
	2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3	타우스액(일양약품)
	4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5	유훈액(유한양행)
	6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
	7	활원액(동화약품) *
	8	아미나젤액(영진약품) *
	9	박카스F(동아제약) *
	10	박탄F(삼성제약) *
	11	리점프액(삼성제약) *
	12	다넥스액(영진약품) *

*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지 않는 품목('10년)

8월부터 고액재산 보유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부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부터는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주택의 경우 재산과표 9억원은 공시가 15억원 수준이며 실거래가로 18~19억원 수준

○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약 18천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480억원).

□ 그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사례) ① 박모씨(66세)는 재산 14억, 자동차(2,000cc, 3년)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식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 미부담

(사례) ② 김모씨(67세)는 박모씨와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장가입자인 자식이 없어 월 252천원의 지역보험료 부담

○ 개정안은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초과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며,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위 사례①의 박모씨(67세)는 법령개정 후 월 252천원 지역보험료 부담

○ 한편,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자와 함께 예외로 논의되었던 20세 미만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 중인 자는 규제심사과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심사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이 제도가 고액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미성년자나 대학원생 등에 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특히 대학원생은 사이버대학 등에 낮은 비용으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 다만,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과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하고,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에 기여한 공헌자임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과에서 예외로 하는 것에 공감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상한선 조정*,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조치와 함께 향후 형평성 있

는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월 보험료 상한선을 직장가입자 186만원→220만원, 지역가입자 182만원 →210만원으로 조정
(7월 기 시행)

■ 자활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현재 각 지자체에서 조성하고 있는 자활기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엇보다도 복지부는 자활기금이 저소득층의 자활경로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재원투입이 긴요한 수요를 발굴하여 자활기금을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게 본인 부담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를 자활기금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 자활기금은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고 지역별 편차가 큰 현실에서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 자활기금은 2000년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돕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마련됨에 따라, 25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통해 설치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0여년이 흐른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지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표출되고 있으며, 이에 자활기금 운용 또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부터 기금 분야 전문기관(한국조세연구원)을 통하여 「자활기금 사용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그간 자활기금 사용현황을 살펴보고,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여년은 자활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노력한 시기로, 작년 말 기준으로 자활기금은 16개 시·도와 213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 3,29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드머니로 그 중 822억원을 집행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는 기금 조성액 대비 누적 집행률은 2001년 3%대에서 2010년 25%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나, 조성된 자활기금 규모를 감안하여 집행률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지침) 자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조성액의 50% 한도내에서 기금 활용 가능

○ 다만, 기금집행액이 2007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추가 조성액 대비 집행률은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평가하였다.

□ 한편, 자활기금은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자활사업 여건, 지자체 의지 등에 따라 자활기금이 운용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마다 자활기금 조성액과 활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6개 시·도에서는 자활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228개 시·군·구 중 15개 기초지자체에서 자활기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기금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조례는 있으나 기금이 미조성된 지자체는 4개이다.

※ (조례 미제정) 서울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인천 옹진군, 경기 과천시, 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군, 의왕시, 이천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충북 진천군, 충남 계룡시

(기금 미조성) 서울 용산구, 강원 고성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 또한, 자활기금을 조성·운용 중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작년에 기금을 미활용한 지자체가 대구, 광주 등 2개 광역시를 포함해 102개로 나타났다.

- 미사용한 대개의 시·도, 시·군·구는 자활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인 5억 원보다 적게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간 자활기금 총 조성액은 3,290억원으로, 경기도가 677억원으로 가장 많은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전라남도, 전라북도, 서울이 각각 364억원, 359억원, 332억원을 조성하여 그 뒤를 이었다.

- 다만, 경기와 서울은 지자체 출연금이, 전남과 전북은 기금운용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지자체별 차이를 보였다.

- 한편, 제주도는 33억원, 울산은 46억원으로 자활기금을 가장 적게 조성한 그룹에 속하였다.

※ 조성(집행)액: 광역지자체 조성(집행)액과 해당 기초지자체 조성(집행)액 합산

□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기금조성·집행이 낮은 요인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주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 지자체 자활기금 담당자가 기금손실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기를 고취할 유인이 부족한 점이 꼽힌다.

○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자구노력으로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고,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등에 대한 창업지원 융자사업 중심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간 총 집행한 822억원 중 약 44%에 해당되는 363억원을 전세점포 임대지원(259억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106억원) 등에 지출하여 지원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일을 통한 자립역량을 키우고 있다.

※(자활공동체)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자활근로사업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단

○ 연도별 기금 집행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17억 2,500만원에서 2010년 153억 8,932만원으로 지난 10여년간 기금 집행액은 9배가량 증가하였으며,

- 지자체별로는 전라남도가 145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집행하였으며, 이어 경기도 142억원, 전라북도 128억원, 서울 78억원 순으로 자활기금을 지출하였다.
- 전남은 저소득층 창업자금 대출, 생활안정 지원 등에 주로 활용하였으며, 경기, 전북, 서울은 전세점포임대, 사업자금 대여 등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금번에 마련하고 있는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이 앞으로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유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언급하며,

○ “또한, 자활기금이 저소득층 빈곤탈출과 자립성공을 위해 의미있는 종자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